

# 현안과 과제

- 중국경제 구조개혁 본격화에 대응해야 한다!
  - 중국경제 구조개혁 점검과 시사점



## Executive Summary

### □ 중국경제, 구조개혁 본격화에 대응해야 한다!

- 중국경제 구조개혁 점검과 시사점

#### ■ 중국경제 구조개혁 지속

최근 중국경제는 6분기 연속 7%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지만, 내·외수 경기의 소폭 개선으로 3/4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18차 3중 전회를 계기로 성장 패러다임 개혁,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금융시스템 개선, 지방재정 건전화, 정부시스템 개선 등 본격적인 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중국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 ■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중간 점검

중국경제의 5대 구조개혁 과제를 중간 점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패러다임 개혁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 효과가 미약하나마 나타나고 있다. 감세, 행정적 규제 완화 등 정책 추진으로 올해 G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45.5%로 제조업 45.3%를 최초로 추월하였고, 도시화추진,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개혁으로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따른 도·농간 소득 격차도 미미하지만 축소되면서 소비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산업부문도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이 향후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 선박, 철강 등 전통 산업의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중국정부는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고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금융시스템 개선은 미진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30%에 가까웠던 국유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013년 현재 1%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BIS 자기자본비율, ROE, ROA 등 은행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대출금리 자유화 등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은 지연되고 있다. **넷째**,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구조적 개선도 정책적 효과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20%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 지방정부 관련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 급감 등으로 지방재정 부실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지난 30년 동안, 정부 부처간 중복된 기능 통폐합 등 행정간소화를 통한 시스템 개혁이 지속되고 있으나, 당과 정부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개혁만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 시사점

향후 중국정부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중국경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비시장은 양적팽창뿐 아니라 보다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내 소비재 수출업체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민간중심 경제운영 체제로의 전환으로 한·중 기업간 협력은 물론 민간부문의 교류협력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셋째**, 중국 금융시장 선진화는 국내 은행, 보험 등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다만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 등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중국경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1. 중국경제 구조개혁 지속

○ 최근 중국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소폭 개선으로 경착륙 우려는 다소 수그러드는 가운데, 향후 성장보다는 구조개혁에 집중된 정책 추진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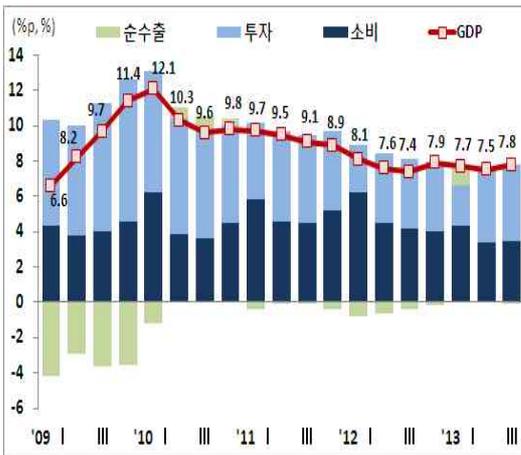
- 6분기 연속 7%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는 중국경제가 최근 3/4분기 소폭 회복

- 소매판매는 6월부터 2개월 연속 13%대 증가가 지속, 고정자산투자도 지난 6, 7월 20.1%에서 8월 20.3%로 소폭 회복
- 특히, 수출증가율은 최근 7,8월 각각 5.1%, 7.2%로 2개월 연속 회복세를 나타내다 9월 계절적 요인으로 -0.3%에 그치며 외수경기 조정국면이 지속

- 다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개혁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18차 3중 전회<sup>1)</sup>를 통해 더욱 구체화된 구조개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확대

-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 유지를 위해 소비중심의 내수형 성장을 지속 강조
- 더욱이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금융시스템 개혁, 지방재정 건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제시와 부패억제, 행정간소화 등을 위한 대대적인 정부시스템 개혁도 예상됨

### < 분기별 중국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CEIC.

### < 향후 중국경제의 주요 구조개혁 부문 >

구분	개혁 내용
성장 패러다임 개혁	- 외수 → 내수(소비중심)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 정부주도 → 민간주도 투자 - 과잉투자 부문 구조개혁
금융시스템 개선	- 금융안정성 강화 - 금융시스템 개혁
지방재정 건전화	- 지방정부 부실화 해소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부 시스템 개선	- 정부직능 통폐합 등 행정간소화 - 신용 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구현

자료 : 중국국무원,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정리.

1) 일반적으로 신지도부가 구성된 후 열리는 첫 3중 전회는 현 정부의 향후 10년의 정책기조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짐. 3중 전회(三中全會)란 매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의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부 회의.

## 2.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중간 점검

### 1) 5대 구조개혁 중간 점검

#### ① 성장 패러다임 개혁

○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진입하면서 GDP 대비 수출 비중은 감소하나 소비 비중은 미미하나마 소폭 상승

- 최근 2년간 수출은 빠른 회복세가 지연되나, 소비는 미약하나마 소폭 개선
  -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3(1~9월)년 현재 26.0%로 지난 2006년 35.7%이후 지속 감소, 최근 5년간 20% 중반대가 지속
  - 반면, 소비는 지난 2000년 62.3%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인다, 최근 2011년 이후 소폭 반등하며 미약하나마 소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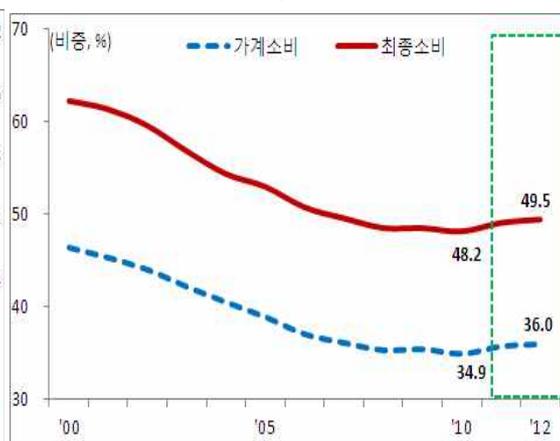
- 다만,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지난 2005년 이후 8년 연속 30%대가 지속되며 가계 소비 확대는 지연
  - 중국정부는 2011~2015년까지 5년 동안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을 30%대에서 45%로 확대 목표 설정
  - 하지만, 2011, 2012년 각각 35.7%, 36.0%로 증가 속도가 미약하면서 2015년까지 정책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중국 수출총액/GDP 추이 >



자료 : 中國統計年鑒, 中國海關, IMF.

< 중국 소비/GDP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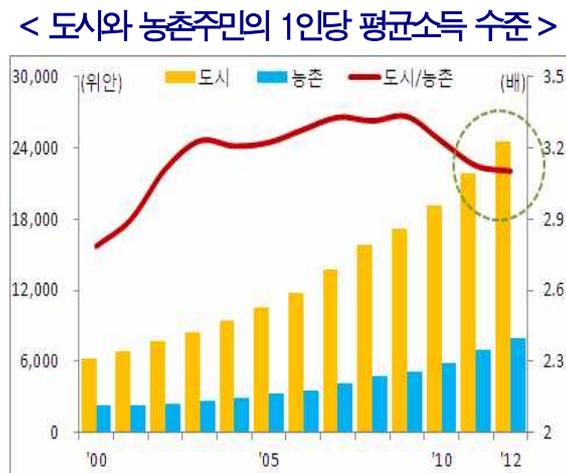


자료 : IMF, CEIC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가공.

- 중국정부는 최근 서비스업 육성, 농촌주민의 소득향상 등 정책 추진 가속으로 소비 확대 효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
  - 감세, 행정적 규제 완화 등 정책 추진으로 올해 GDP 중 서비스업 비중을 최초로 제조업을 추월
    - 지난 8월 1일부터 소규모 기업(월 매출 2만 위안이하)을 대상으로 증치세와 영업세를 잠정 면제, 약 600만개 소기업에게 세수 감면 효과 기대
    - 또한, 지난해부터 '외국인투자목록'에서 투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고부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 정책 추진
    - 특히, 유통산업에 대해서도 은행 카드 수수료 인하, 농산품 유통과 관련된 용수·전기 요금 인하 등 세제혜택 부여
    - 이에 따라, 중국 GDP 중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1~9월) 현재 각각 45.3%, 45.5%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추월, 취업자 수 비중도 지속 증가2)
  - 도시화 추진,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이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도·농간 소득격차가 소폭 축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상향으로 소비 촉진 기여 예상
    - 지난 2009년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대비 도시민 1인당 가처분소득 비중이 3.33배에서 2012년 3.10배로 소폭 감소
    -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 2000년 각각 412위안, 445위안에서 2013년 현재, 1,400위안, 1,620위안으로 각각 3.4배, 3.6배로 급증



자료 : CEIC, 中國國家統計局.



자료 : CEIC.  
주 : 도시는 가처분소득, 농촌은 순소득 기준.

2)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은 지난 2000년 1차산업 50.0%, 2차산업 22.5%, 3차 산업 27.5%에서 2012년 각각 33.6%(2.6억명), 30.3%(2.3억명), 36.1%(2.8억명)로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지속 확대.

②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부터 제조업 혁신 경쟁력 강화 등 산업고도화 추진뿐 아니라 철강 등 전통 산업분야에 민간투자 유도 가속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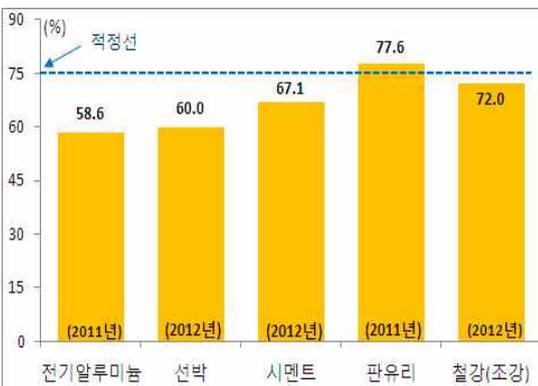
- 2008년부터 확대되고 있는 과잉 설비투자 등 투자의 비효율성 지속
  - 지난 2008년 투입된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한계자본계수<sup>3)</sup>가 급증하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투자자본의 기여의 비효율성 지속
  - 2012년 현재, 선박, 시멘트, 철강 등 전통 산업의 설비가동률은 각각 60.0%, 67.1%, 72.0%로 적정선 75%를 하회하는 등 과잉 설비투자 양상을 보임

< 중국의 한계자본계수 추이 >



자료 : 中國統計年鑑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계산

< 중국의 산업별 설비가동률 현황 >



자료 : 中國國家發展計劃委員會 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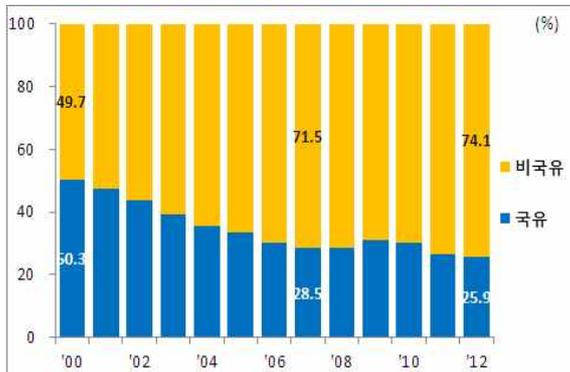
주 : 설비가동률이란 (생산수요/생산능력 x100)으로 일반적으로 75%이하는 과잉투자를 의미

-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과잉 설비투자가 심한 선박, 시멘트 등 철강 등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
  - 올해 1~3월까지 자동차, 철강, IT, 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제하고 있을뿐 아니라, 4월에는 2022년까지 노후산업단지 재편 등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방안도 제시
  - 지난 8월 4일, 중국 국무원은 선박에 대해 2013~2015년까지 3년간 '선박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산업업그레이드 방안'에서 제시

3) 한계자본계수(marginal capital coefficient)이란 1단위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투자단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자본형성/명목GDP)/실질 GDP 증가율)로 계산할 수 있음(일본총합연구소, 2013).

- 특히, 철강 등 국유기업 자본이 집중된 산업에 대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추진
  - 지난 10여년동안 전체 투자 중 국유기업 비중은 지속 감소할뿐 아니라, 경영 성과도 비국유기업에 비해 지속 약화
  - 하지만, 철강 등 전통산업에 대한 국유주도의 자본 집중으로 과잉투자 양산 등 비효율적 산업 운영 지속
  - 이에따라 올해 7월 중국정부는 철도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허용한 후, 이미 2013년 착공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대거 유치하고 있으며 2014~2015년까지 민간자본 목표액을 2,000억 위안을 설정

< 국유 및 비국유기업 투자 비중 >



자료 : 中國統計年鑑(2012).

< 국유 및 비국유기업 자산수익률 추이 >



자료 : 中國統計年鑑(2012).

주 : 자산수익률은 이윤총액/자산총액 비중으로 대체함.

- 더욱이 12차 5개년부터 향후 10년간 신성장산업 등 고부가 산업 육성도 추진
  - 12차 5개년 계획 동안 중국정부는 친환경 산업,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8%까지 향상을 목표
  - 이를 위해서는 최근 철강, 전기알루미늄, 시멘트 등 전통 분야에서의 과잉생산을 줄이고 ICT 등 고부가 제조업 분야 육성을 추진
- 다만, 철강, 시멘트 등 과잉생산이 많은 5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구조개혁안은 올해 10월에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개혁 효과는 올해 하반기 이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③ 금융시스템 개선

○ 12차 5개년 계획으로 제시된 금융발전 및 개방화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야기되는 리스크에 대한 개혁이 미약한 양상 지속

-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금융업 규모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금융시장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룸

- 중국정부는 금융서비스업 발전 모색을 위해 지난 2012년 말에 제시한 2015년까지 GDP 대비 금융업 비중을 5%내외로 유지하는 목표치에 대해 성과가 나타남
- 또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융자총액<sup>4)</sup> 중 비금융기업의 직접금융 비중을 2015년까지 15% 이상 증가시키는 목표에도 근접

< 중국 GDP 중 금융업 비중 추이 >



자료 : 中國人民銀行, 中國國務院.

< 비금융기업의 직접금융 비중 추이 >



자료 : 中國人民銀行 자료를 바탕으로 HRI 분석.

- 더욱이 중국 은행업의 부실채권 관리 등을 통해 부실관리 능력도 최근 향상

- 지난 1999년 중국 기업들의 부실화 확대에 따른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약 30%를 상회하는 등 금융부실 확산 경험<sup>5)</sup>
- 더욱이 대손충당금 등 대출자금의 부실화에 대비한 사전조치 강화 등에 따라 2008년부터 부실채권비율(NPL)은 지속 하락하여 2012년 현재 1%미만으로 안정화됨
- 2013년 2/4분기 현재,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 총자산 순이익률(ROA) 등 경영 건전성 지표는 각각 크게 향상<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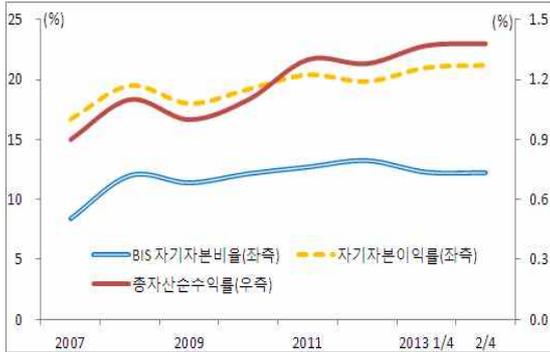
4) 사회융자총액이란 중국내에서 은행 대출 및 은행인수어음,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합한 유동성 지표  
 5) 지난 1998년 관치금융으로 야기된 4대 국유은행의 막대한 부실이 확산, 4대 자산관리공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를 통해서 1999년 당시 1조 4,000억 위안 규모의 부실채권을 처리한 바 있음.  
 6) BIS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BIS(Bank of International

<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추이 >



자료 : 中國人民銀行.

< 중국 상업은행의 경영 건전성 추이 >



자료 : CEIC.

- 하지만 최근 6월 발생한 신용경색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으로 부각된 금융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미진한 상황

- 올해 중국의 통화량(M2, 광의의 통화)은 연초에 제시한 목표치 13%를 상회하는 등 유동성이 풍부한 양상 지속
- 하지만, 지난 6월 20일 상해은행간금리(Shibor)<sup>7)</sup>, 환매조건부채권 금리(Repo, 7일)가 각각 13.44%, 10.77%로 급등하며 일시적인 신용경색이 확산
- 이에 대해 지난 7월 중국인민은행은 기존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금리자유화를 통해 중소 민간기업 대출 제한을 완화해 간접적 조치 시행
- 하지만, 중국내 민간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저장성 윈저우시(溫州市)의 민간대출 금리(1년 치)는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14~16%로 중소기업 대출 부담 양상 지속

< 중국의 유동성 추이 >



자료 : 中國人民銀行, 中國國務院.

< 2013년 Shibor와 Repo 금리 추이 >



자료 : 中國人民銀行.

Settlement)는 8%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평가,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은 순자산을 자산총액을 나눈 수치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임.

7) 상하이 은행간금리(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란 2007년에 도입된 중국식 '리보금리(Libor)'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표적인 금리.

④ 지방재정 건전성

○ 투자 중심의 성장구조 지속으로 지방정부 부채 확대 등 지방재정 건전성 약화에 대해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양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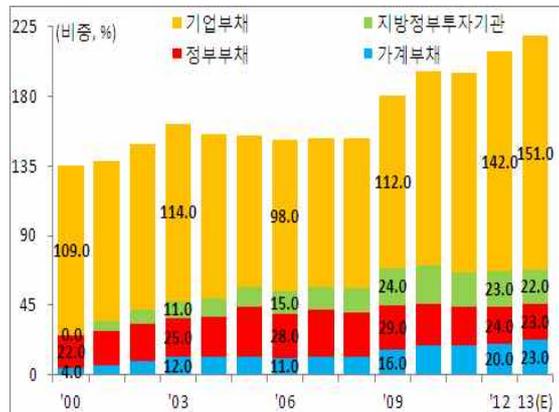
- 중국경제는 투자 중심의 성장구조가 지속되면서 부채도 점진적으로 확대
  - 2013년 3/4분기 현재, 중국 투자의 GDP 기여율은 약 56%로 투자 중심의 성장이 지속, 부채 비율도 증가
  - 2012년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약 24%로 높지 않은 수준이나, 기업부채, 지방정부 산하의 부동산개발 공사의 부채 비중은 각각 142%, 23%에 이르며 부채 가중 압력이 확대

< 중국 투자의 GDP 기여율 추이 >



자료 : CEIC.

<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 추정 >



자료 : BIS & Goldman Sachs(2013).

1. 기업부채는 비금융기업 전체를 기준.
2. 지방정부투자기관(LGFV)는 지방정부 산하 부동산개발 공사를 의미.

- 한편, 지방재정 건전성은 최근 지방정부의 토지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적 압박이 지속 확대

- 지난 2012년 중국의 재정수입 중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 비중은 약 24%로 중국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가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속 하락
- 특히, 2012년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수입 중 약 10%로 지난 2010년 약 38%보다 급감하며 재정수입원 지속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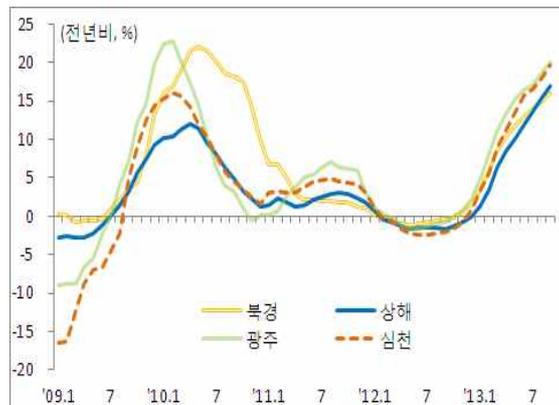
- 지방정부 부채는 지난 2010년 GDP의 약 27%인 10.7조 위안으로 집계된 후 중국정부의 공식 발표9)가 지연되고 있으나, 2012년 약 14조 위안(GDP의 28%) 이상으로 추정10)
- 더욱이 2011년부터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2013년부터 정책적 실효성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제어가 실패해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도 상존
  - 중국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초까지 국팔조(國八條), 국십조(國十條), 신국팔조(新國八條), 국오조(國五條) 등 4차례 부동산 규제정책을 단행
  -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효력이 지난 2011년, 2012년 두해 동안 지속되었으나, 2013년으로 진입하면서 주택가격 급증에 따른 정책적 실효성 약화
  - 북경, 상해 등 중국 주요도시의 주택가격 증가율은 2011~2012년까지 둔화되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

< 중국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 >



자료 : CEIC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중국 주택가격 추이 >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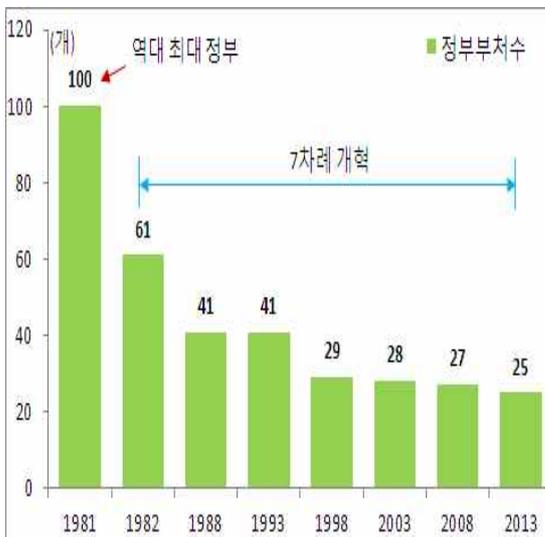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오는 11월 개최될 제18차 3중전회에서 지방정부의 부실화 억제를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발행을 허용할 예정이나, 지방부채 확산에 대한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대신해서 발행해주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신용등급이 높은 공기업과 지방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할 것으로 예상

8) 2013년 6월, 중국공상대학과 중국시장유통학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추정치 기준.  
 9)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 부채 규모는 오는 11월 중국정부가 지방성별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10) 중국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는 지난 10월 약 14~18조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10~11월내에 중국정부가 공식발표할 예정.

⑤ 정부 시스템 개선

- 지난 30년간 중국 정부는 부처 간 중복된 업무 통폐합 등 정부의 행정간소화를 지속 단행하고 있으나, 당과 정부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개혁만 지속
  -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정부직능 개혁은 현재까지 7차례 진행
    - 1981년 정부부처 수는 100개로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조직 구성했으나, 2003년부터는 WTO 체제이후 경제시스템 개혁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
    - 2008년부터는 정부부문을 통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는 대부제(大部制) 개혁이 첫 시작
  - 시진핑 정부는 2017년까지 정부부처 통폐합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 정보시스템 등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
    - 2003년부터 본격화된 전자정부 구현 프로젝트의 성과로 지난 2007년에는 약 6억 인구의 개인 신용정보시스템을 수립
    - 시진핑 정부에서는 통합된 신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금융실명제 개선,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 등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 강화 계획
  - 하지만, 당과 정부를 분리하는 개혁은 지속 유지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정부시스템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역대 정부부처수 추이 >



자료 : 中國國務院.

< 2013-2017년까지 정부시스템 개편 계획 >

구분	개편 분야	
	정부	행정
2013 (29개)	- 부처 개혁(8개) - 정부 직능(5개) - 국유자산세수 (17개) - 항목 심의비준 (5개)	- 공상 등기(2개) - 재산 등기(2개) - 공공서비스(4개) - 사회복지(2개)
2014 (28개)	- 부처 개혁(5개) - 정부 직능(6개) - 국유자산세수 (4개) - 항목 심의비준 (2개)	- 공상 등기(1개) - 재산 등기(5개) - 공공서비스(3개) - 사회복지(2개)
2015 (11개)	- 부처 개혁(1개) - 정부 직능(1개) - 항목 심의비준 (1개)	- 공상 등기(1개) - 재산 등기(2개) - 공공서비스(3개) - 사회복지(1개)
2017 (4개)	- 법치 보장 국무원 직능 기본 완성	- 통일 신용정보 플랫폼 - 지치조직 시스템 - 조직관리 시스템

## 2) 종합평가

- 최근 중국경제는 성장 패러다임 개혁 등 5대 구조개혁을 진행 및 예정되면서, 일부는 미미하나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 성장 패러다임 개혁,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등에서 완만한 효과 기대
  - 성장 패러다임 개혁은 세제정책 등으로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 분포가 높은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으로 소비촉진에 기여
  - 한편, 철강 분야에서 민간 투자 유치와 함께 선박 등 설비투자 분야에 대한 본격적 구조개혁으로 향후 개혁 효과가 기대됨
- 하지만, 금융시스템 개선, 지방재정 건전화 등에 대한 개혁은 리스크 해소에 대한 단기적 조치가 진행될 뿐 근본적 구조개혁은 지연
  - 올해 발생한 신용경색 등 금융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대출금리 자유화 등 가격개혁을 단행했으나, 중소 민간기업 대출 문제는 여전히 지속
  - 지방정부의 토지매각수입도 축소되고 있어서 투자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는 한 지방부채는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큼
- 한편, 정부시스템 개선은 일부 경제적 효과는 기대되나, 당정 분리가 지속되는 한 공직자 부패, 부처기능 중복 등의 반복으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상존
  - 향후 정부시스템 개혁은 금융실명제 개선 등 금융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목적도 커서 신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
  - 다만, 공산당 중심의 당체제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겸직하는 시스템에서 행정시스템 간소화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큼

### < 최근 중국경제의 주요 구조개혁 평가 >

구분	개혁 방향	개혁 평가
성장 패러다임 개혁	- 서비스업 분야(감세, 규제완화) - 농촌주민 소득 증대(도시화 추진, 사회보장제도 개선)	- 소비 소폭 개선 - 산업부가가치 : 서비스업·제조업 - 도농간 소득 격차 축소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확대 - 과잉투자 부문 구조조정	- 올해 하반기부터 개혁 본격 시작 - 정책효과는 내년부터 기대
금융시스템 개선	- 은행업의 부실관리 능력 향상 - 가격 자율화	- 신용경색 억제 조치 미진 - 중소 민간기업 대출 어려움 지속
지방재정 건전화	- 부동산 안정화 정책 강화 - 지방재정 부실화 감소	- 부동산 버블 및 붕괴 우려 확대 - 지방부채 해소 지연
정부 시스템 개선	- 행정간소화, 전자정부 등 정부효율성 강화	- 행정간소화 효과 기대 - 정부시스템 개혁 효과 제한적

### 3. 시사점

- 향후 중국경제는 본격적인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을 둔화는 전망되나,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중국경제의 질적 향상으로 우리에게 창출될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첫째, 질적으로 향상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수출 확대 모색
    - 향후 중국의 소비시장은 양적일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고급화 시장 수요 확대가 예상되므로,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對中 소비재 수출품목 확대 등 무역 품목 다변화 전략 필요
    - 또한 소비재 수출촉진을 위해 대기업뿐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도 필요
  - 둘째, 민간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으로 한중간 기업 및 민간 협력 확대 필요
    - 최근 교통 인프라 등 산업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등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적 변화가 나타남
    - 이에 따라 중국의 민간경제 확대에 대비한 건설, 교통 등뿐 아니라, 경제 전방위적으로 기업 및 민간 협력 강화가 필요
  - 셋째, 중국 금융시장 선진화에 따른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기회 창출 확대
    - 향후 금융시장 개방 및 시스템 개혁 등 금융선진화가 진전될 경우를 대비,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략적 기회 활용이 필요
    - 또한, 중국정부가 고령자, 농민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겨냥한 연금 및 보험시장 진출 기회도 모색
  - 넷째, 다만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실패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적 대응도 필요
    - 금융리스크 확산 등 중국의 구조개혁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리스크에 대비해 중국경제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적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경제연구본부 한재진 연구위원 (02-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연구원 (02-2072-6274, junius73@hri.co.kr)